

이순신 유적 완도 총무사 ‘동무’ 서까래 휘어 붕괴 위기

郡, 뒤늦게 예산 요청…문화재청 답변없어 방치 우려

전남 지자체 너도나도 이순신 마케팅…유적관리는 엉망

정유재란(1597~1598) 당시 노량해전에서 숨진 총무공 이순신이 잠시 봉안됐던 완도 고금도 총무사 내 ‘동무’(위패를 모시기 위해 대성전 앞 동쪽에 세운 건물)의 서까래가 휘어 무너질 위기에 있다.

완도군이 지난달 말 이같은 현상을 뒤늦게 발견하고 임시방편으로 철제 빔을 받쳐두었지만 파편이 쏟아져내리는 등 전면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전남도와 시·군 곳곳에서 총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마케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중요 유적에 대한 관리의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960년 사적 114호로 지정된 고금도 총무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8억5600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건물 복원 및 보수,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고금도 총무사 동무는 서까래 가운데 부분이 갈라진 채로 휘어져 있었으며, 지붕에서 떨어진 일부 잔해물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철제 빔으로 받쳐 간신히 서까래를 지탱하도록 했으나 ‘붕괴’는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동무는 총무공 이순신의 영정을 모신 정전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건물로, 1959년부터 총무공의 조방장 겸 가리포 첨사를 역임한 이영남 장군을 모신 곳이다.

지난달 말에서야 이같은 현상을 파악했

다는 완도군은 뒤늦게 문화재청에 전면보수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은 없는 상태다. 보강 공사 및 예산 지원 범위를 둘러싼 협의로, 장시간 이 같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나 관람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개방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찾은 관람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총무공 이순신을 주제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노량해전에서 숨진 뒤 총무공의 유해가 83일간 안치됐던 이곳에는 매주 1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블라벤태프 당시 기와가 날라가고 일부 충격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라며 “언제 건립된 것인지 불분명해 부실공사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1억5000만원을 들여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여수시는 2020년까지 국비 포함 150억원을 투입해 삼도수군통제영(전라좌수영)을 복원할 예정이다. 또 보성군은 총무공 이순신이 머물렀던 열선루 복원사업에 90억원을 배정하는 등 이순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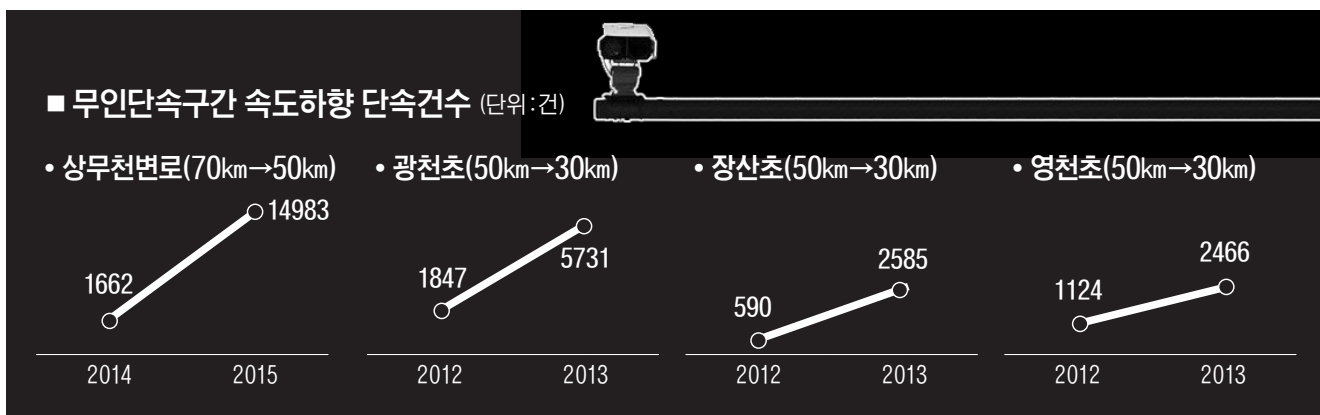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 고금도 총무사내 동무의 서까래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완도군이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을 철재빔으로 받쳐 놓았다.

/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벤츠 부순 30대 재물손괴 혐의 적용 검토

경찰 “리스회사에 소유권” 판단

경찰이 리스(Lease)형태로 사용 중인 2억원대의 벤츠 차량을 훼손한 30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재물손괴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벤츠를 운전할 권리와는 별개로 소유권이 현재 자동차 리스회사에 있는 만큼 고의로 차량을 부순 운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은 모 캐피탈 업체를 통해 리스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파손한 A(34)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 1억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300만원씩 캐피탈 업체에 상환하는 형태의 리스 계약을 맺고 빌린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부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리스 계약을 통해 A씨가 벤츠 차량을 운전할

권리는 넘겨받았으나, 비용 전제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은 여전히 리스회사 측에 있는 만큼 불법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벤츠 판매점 앞에서 자신이 몰던 2억9000만원짜리 벤츠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이용해 부순 후 판매점 출입로에 세워놓아 판매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3일 입건된 상태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운전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판매점 측이 차량 교환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판매점을 찾아가 고의로 자신이 몰던 차량을 파손시켰다. 판매점 측은 그러나 “(해당 차량에서) 소유방지장치와 배기구를 개조한 부분이 확인돼 시동 꺼짐 현상과 연관돼 있는지 검토하느라 조치가 늦어지고 있던 중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확 낮춘 과속 기준…확 늘어난 과태료

광주경찰청 5곳 하향조정
1년새 단속건수 9배 급증
“세수 늘리려는 꼼수” 지적

광주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기준을 낮추면서 단속건수가 1년만에 무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인단속구간 속도하향 단속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4곳, 2014년 1곳 등 5곳의 무인단속구간 속도를 하향했다. 하향 조정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단속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9배 증가했다.

사고다발지역을 이유로 지난해 10월7일 제한속도를 시속 70km에서 50km로 낮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천변로(상무소각장~곡락교)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단속한 속도위반 건수는 지난해(1~10월) 1662건에서 올해(지난해 11월~올해 7월) 1만4983건으로 무려 9배나 늘었다.

실제 이 구간을 오갔던 운전자 정보(여·46·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평소 과속을 하지 않는데도 이곳에서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며 “제한속도가 70km에서 50km로 낮춰진 줄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3년 6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50km에서 30km로 낮춘 남구 장산초교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건수는 하향조정 전 1년간 590건에서 조정 후 1년간 2585건으로 4.3배 증가했다. 서구 광천초교는 1847건에서 5731건(3.1배), 광산구 영천초교는 1124건에서 2466건(2.1배)으로 늘었다.

1배)으로 늘었다.

올해는 동구 주남마을 앞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췄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1388건이 단속돼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 1473건과 맞먹었다.

단속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폭증했다. 속도위반 과태료가 지난해 기준 1건당 평균 5만1000원임을 감안하면 상무천변로에서만 1년새 6억8000만원가량 늘어난 7억6413만원을 거둬들였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세수를 데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기준을 하향조정된 곳은 사고빈발구역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과속단속 카메라 어디로 사라졌지?

광주 22곳 새 장비로 교체

화질 높이고 측정오차 줄여

40대 회사원 박주영씨는 매일 같이 광주시 남구 백운동 고가에서 조선대 정문을 거쳐 풍향동에 있는 회사로 출근을 한다. 그런데 박씨는 최근 출·퇴근 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 시간이 촉박할 때면 눈앞까지 갈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지역 간선(중심)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및 신호 단속카메라 20여 대가 일제히 사라져 출·퇴근 시간 이 도로를 오가는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속 및 신호 단속 카메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다. 동구 서석동 조선대 사거리, 서구 서창동 서창사거리, 남구 봉선동 남광주농협 앞, 북구 일곡동 마트 앤마트 사거리와 운암동 무등경기장 사거리 등 모두 22곳 22대에 이른다.

이들 카메라가 사라진 이유는 경찰청이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까지 철거 작업을 마쳤고, 이달 말까지 새로운 장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새 단속 카메라는 화질도 향상되고, 속도 측정 오차 범위도 시속 3km 내외로 줄어든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의 내구연안은 7년이다”며 “설치된 지 8~9년이 지난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노후화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서 주기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신호위반과 과속을 모두 단속하는 다기능 카메라 91대, 과속 단속 카메라 50대 등 모두 141대가 설치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집주인 입원 틈타 대문까지 팔아치워



○…혼자 살던 집주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이 가전제품은 물론

창틀·대문까지 야금야금 뜯어내 팔아치운 파렴치한 세입자 2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최모(29)씨 등 2명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조모(70)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싱크대 알루미늄 상판, 대문, 에어컨, 보일러 등 모두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셋방살이를 하던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끝나 집주인의 아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며 “하지만 집주인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물건을 내다파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토 205평, 건 135평) 월수익 200만 (보 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85평 수완 모아A.P.T앞 (아파트 6천세대 밀집지역) 상가 밀집지역 (신한은행 뒷편) Pc방(체인점)임대완료 (차후 학원,사무실 적합) 월수익 180만 (보 3천,용 2억5천만) 실 투자금액 → 1억 매가 3억 8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경매컨설팅 교육 062-382-5500 010-6832-9700
---	---	---	---

010-7384-7800 / 010-6670-9800